

2008년 중국경제 8대 이슈

박래정 연구위원(북경) ecopark@lgeri.com
 쑨저(沈佳) 선임연구원 jshen@lgeri.com

1. '08년 경제성장률, 6년 만에 한 자리수 가능성
2. 자산시장에 '패닉' 올까
3. 노사 갈등국면 개막
4. 외자기업 稅 테크에 고심
5. 환경보호·에너지 관리 비상
6. 갈림길에 설 양안(兩岸) 관계
7. 세계로 뻗어나가는 중국기업
8. 중국 문화산업의 르네상스 오나

고도성장을 구가했던 중국경제에 빨간 불이 켜졌는가. 실물경제의 선행지표와 같은 주식시장이 휘청거리고 부동산 가격은 잇따른 정부의 시장안정책을 비웃듯 마냥 상승세를 타고 있다. 인플레이 우려는 자칫 실기할 경우 큰 충격이 우려되는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는 관측이 제시되고 있다. 경상수지 흑자가 지속되는 데 따른 과잉 유동성이 경제 곳곳에서 파열음을 내기 시작한 것으로 봐야 할까. 거시경제 곳곳의 지표가 경고음을 발하는 사이 정부의 경제구조 개선과업은 내년 정점으로 치닫는다. 법인세 체계의 뼈대를 바꾸는 기업소득세법이 본격적으로 가동되고, 노동합동법(계약법) 역시 내년 노동시장의 판도를 바꿔갈 것이다. 반농단법(공정거래법), 파산법 등 개혁법들도 내년부터 시장규율에 나서게 된다. 환경보호와 에너지절약을 지속성장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제시한 중국 정부는 더욱 가열차게 이 목표에 매달려야 2010년 스스로 정한 구속성 목표치를 가까스로 맞출 수 있다. 이 같은 제도변화들은 중국을 보다 글로벌 스탠더드가 통용되는 경제로 이끌겠지만, 외자기업의 경영환경에는 부정적으로 작용할 소지가 있다. 내년 대만 총통선거를 앞둔 양안 관계도 변곡점을 맞이하게 된다. 신 협력시대를 열지, 양안간 포성이 울릴지는 선거 결과와 미국 등 주변 정세에 달려있다. 중국 공산당 지도부는 대만문제에 있어서는 타협불가 원칙을 견지하고 있지만 올림픽 개최란 변수가 선부른 예단을 어렵게 한다. 외자기업의 입장에서 주의깊게 관찰해야 할 2008년 중국경제의 중요 이슈 8가지를 살펴 본다.■

“인플레 우려가 현실화할 경우 정부로선 더욱 강력한 긴축정책을 피하기 어렵다.”

1. '08년 경제성장률, 6년 만에 한 자리수 가능성

강력한 인플레 억제책 나올 지 관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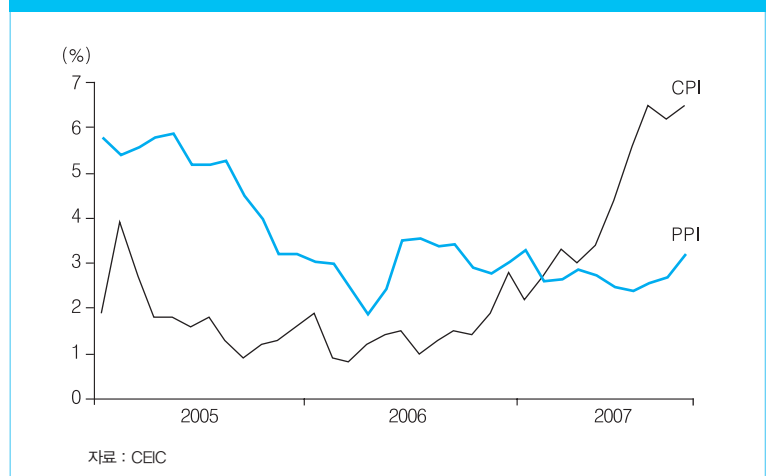
내년 중국 경제가 당면하게 될 가장 큰 위협은 인플레이션이다. 올 10월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전년 대비 6.5%나 올라 연간 목표치 3%를 크게 넘어섰다. 소비자물가 상승의 주범은 CPI 산출에 3분의 1이나 기여하는 돼지고기 콩 등 식품류이다.

다만 유가와 식품 등을 제외한 코어 CPI 상승률은 1%에 그쳐, ‘인플레이션 우려는 기우’라는 당국의 낙관 섞인 전망의 근거가 되었다. 실제로 식품류 가격이 내년에도 올해 같은 폭등세를 보일 가능성은 그다지 높지 않다. 올해의 축산파동은 전염병 등 돌발변수가 작용한 데다, 높은 판가에 자극 받아 내년 공급량이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중국도 원유 수입국이다. 국제유가의 움직임 역시 물가양등의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러나 에너지 분야에 포진한 대기업들이 중앙 통제를 받는 국유기업이기 때문에 국제유가 상승의 충격이 그대로 소비자물가에 반영되진 않는다.

문제는 올해 폭등한 생활물가가 제조업 전반에 파급되는 경우다. 그 동안 중국 제조기업들은 비용상승 요인을 국내의 시장 개척을 통한 매출확대와 자산투자 이익 등으로 상쇄해왔다. 덕분에 제조업 분야 물가지수가 안정세를 보일 수 있었지만, 이러한 흡수경로가 내년에도 작동할 수 있을 지는 불확실하다.

중국 정부는 2006년부터 경제구조 개선 작업의 법제화에 본격 착수했으며 내년 발효를 앞두고 있다. 기업소득세법, 노동합동법, 각종 환경입법, 토지 관련조치 등이 그 예이다. 소득재분배와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

〈그림 1〉 소비자 및 생산자 물가 추이



“ 성장을 이끄는 소비 투자 해외수요 모두 약간씩 둔화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

한, 불가결한 개혁조치이지만 당장 기업들의 부담증가는 피할 수 없다. 기업들이 누려온 이윤공간이 줄어들 경우 제조업 분야의 판가인상도 현실화될 우려가 있다.

이 같은 우려가 불행하게도 적중한다면, 지구촌 경제 호황국면에서도 글로벌 인플레이를 저지해왔던 중국산 수출품의 가격이 상승하게 된다. 더욱이 내년에도 중국 위안화는 절상세를 보일 것으로 보여 최소한의 (달러표시) 수출가격 상승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하지만 중국 내수시장의 치열한 경쟁관계, 연해지역에 집적화된 생산 거점들의 효율성 등을 감안할 때 중국이 물가상승을 선도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중국은 올 연말 정부 경제공작회의에서 '신중한' 긴축에서 '전면적' 긴축으로 전환한다고 공식 천명했다. 이미 인민은행이 대출잔액을 10월 말 잔액수준으로 맞추도록 창구지도에 나서고 있다. 이러한 기조는 적어도 내년 초반까지는 이어질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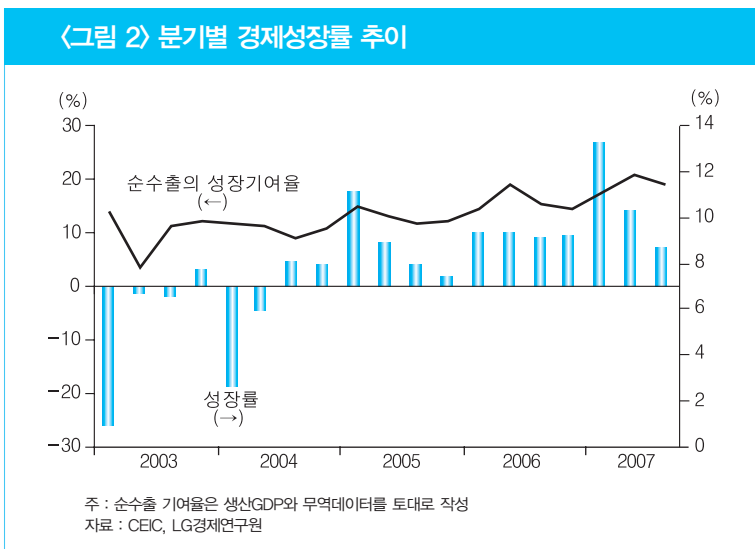
소비 · 투자 · 해외수요 모두 둔화할 가능성 높아

중국을 고정자산투자가 성장을 이끄는 경제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투자가 차지하는 성장기여율은 40% 안팎이며 고정자산투자의 대부분은 공업기업이 담당한다. 이 공업기업의 이윤증가율이 올해 들어 전년 대비 40% 이상 폭증했다가 3분기 들어

전년 대비 30%대로 낮아졌다. 순익에 20% 정도 기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주식 등 투자자산 수익이 악화하는 것과 무관치 않다. 내년엔 각종 비용상승 요인과 올림픽 이후 자금조달 상황에 대한 불안감, 해외수요 부진 전망 등이 겹쳐 투자확대를 망설이는 기업이 적지 않을 것이다.

구조개선의 키워드는 소비이다. 성장기여율이 40% 미만에 머물고 있는 소비를 비약적으로 키워 자생적인 성장동력을 확보하려는 것이 중국정부의 복안이다. 소비의 성장기여가 높을수록 성장의 과실을 중국 인민

〈그림 2〉 분기별 경제성장률 추이



이 더 향유하게 되기 때문이다. 올해도 소비재 소매판매액으로 파악해본 소비증가율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모양새를 나타냈다. 그러나 물가상승 요인을 제거한 실질 증가율은 3분기 들어 하락세로 반전했다. 도시지역의 1인당 소비지출 증가율(14%)은 여전히 가치분소득 증가율(17.6%, 9월 표본조사)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최근 조정기를 맞은 주식시장의 침체가 장기화되면, 부(-)의 자산효과까지 겹쳐 내년 소비는 더욱 위축될 수 있다.

미국 서브 프라임 사태의 후폭풍은 중국산 제품의 해외수요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무엇보다 중국 수출의 21%를 차지하는 북미시장의 수입수요가 크게 줄어들 지가 큰 관심사이다. 중국산 제품의 대미 수출증가율은 올 하반기 이미 10% 초반까지 떨어졌다. 미국의 고용지수 및 소비자신뢰지수 하락이 본격화할 내년엔 이 지표는 더욱 하락할 것이다.

중국 경제가 수년간 10%를 훌쩍 넘는 고도성장을 구가할 수 있었던 것은 장기간 물가가 안정세를 보여왔기 때문이다. 내년에 이 전제가 흔들린다면, 중국 정부로선 '고도성장을 적정 관리' 하는 수준에서 벗어나, '성장을 약간 희생하는 긴축'으로 돌아설 수밖에 없다. 내년 춘제(春節) 즈음의 물가상승세가 내년 한 해의 긴축 강도를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

투자, 소비 및 수출시장 여건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내년 중국경제 성장률은 10% 초반에 그칠 가능성이 농후하다. 앞서 제기한, 전 산업부문의 물가상승세가 현실화하고 국제유가 상승 같은 대외적 충격이 더해진다면, 9%대 성장으로 내려앉을 가능성도 있다. 6년 만에 10% 미만 성장세인 셈이다. 국제 연구기관들의 중국경제 성장률 전망도 시간이 지날수록 하향세를 타고 있다.

그렇지만 9% 후반의 성장률일지라도 저조한 성장세는 결코 아니다. 오히려 적절한 '숨 고르기'는 자산시장 거품을 제거하는 등 건전한 성장기조 유지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해외수요 부진도 미국의 쌍둥이 적자와 중국의 과도한 대외수지 흑자라는 글로벌 불균형이 해소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10%대 성장에 과열을 우려하다가, 1% 포인트 낮은 성장에 위기론을 제기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더욱이 내년 거시경제 상황만으로 중국경제의 미래성장성에 의문부호를 달 필요는 없을 것이다.

“국제적 충격이 가해진다면, 내년 성장률은 6년만에 10% 미만으로 떨어질 수도 있다.”

“ 펀더멘탈이 양호한 만큼 내년 주식시장은 완만한 상승 가능성이 높다. ”

2. 자산시장에 ‘패닉’ 올까

북경 올림픽이 8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북경올림픽 이후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올림픽 개최를 기화로 숨가쁘게 달려온 자산시장이 시련의 계절을 맞이할 것이란 분석이다. 과연 그럴까.

주식시장 장기침체는 중 정부도 바라지 않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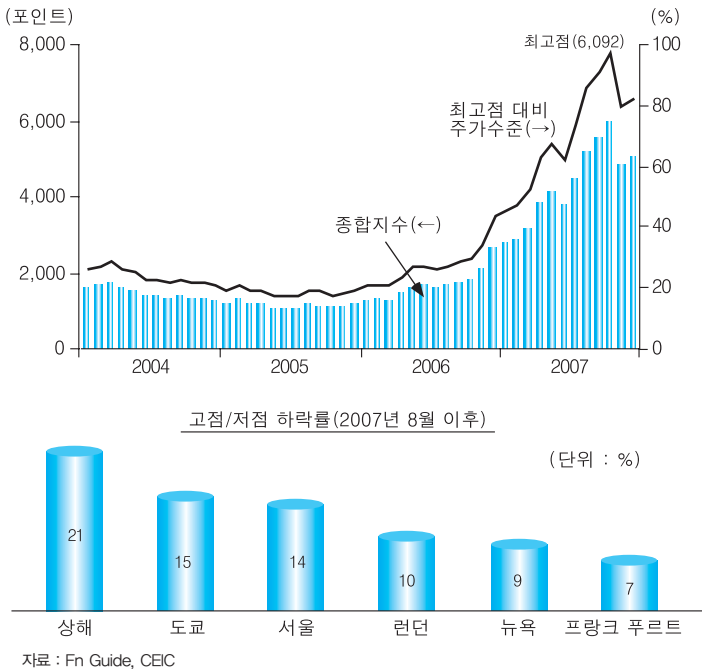
먼저 주식시장을 보자. 서브 프라임 이후 ‘중국 금융시장은 안전하다’는 정부 관계자들의 언급에도 불구하고 중국 증시는 뒷서리를 맞았다. 올 8월 이후 최고점과 이후 최저점을 비교하면 도쿄, 서울, 뉴욕 주식시장이 각각 15%, 14%, 10% 정도의 낙폭을 기록한 데 비해 상하이 내국인용 A주 종합지수는 21%나 폭락했다. 내년 중국 경제 펀더멘탈에 대한 우려 외에도 2005년 하반기부터 숨돌릴 틈 없이 달려온 폭

등장에 대한 우려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주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상장기업 순익을 살펴보자. 올해 60% 안팎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지만, 하반기 들어 그 기세가 누그러지고 있다. 증권사들의 내년 전망은 30%대로서, 올해보다는 낮지만 여전히 높은 기대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증시에 대한 중국 정부 영향력은 절대적이다. 당국은 기업공개 규모, 금리수준, 외국 적격투자자(QFII) 투자한도, 유통주 규모 등 주식수급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정책수단을 통제할 수 있다. 최근 조정장세는 지난 수년 동안 과도한 급등세의 리스크를 완화시킨다는 점에서 긍정적이지만, 장기 침체는 정

〈그림 3〉 상해종합지수 추이



“주택공급난이 해소되지 않아 주택가격은 추세적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다.”

부에게도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일 것이다. 유통주 전환이라는 기업개혁 과제가 아직도 진행형이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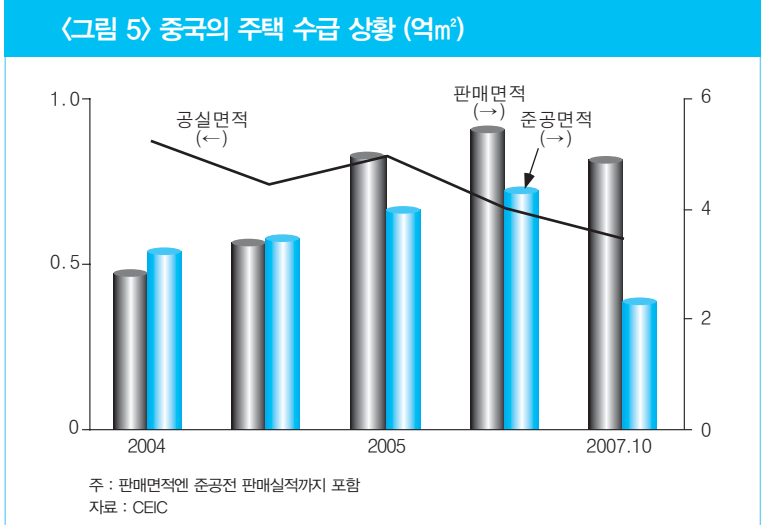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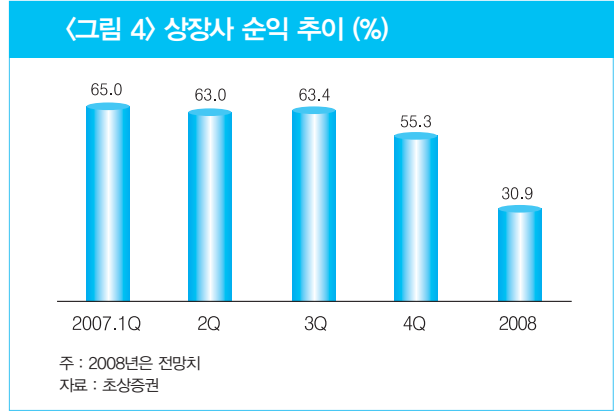
시가총액을 경제규모(GDP)와 비교해보면, 싱가포르, 호주, 영국, 미국 등 선진국의 시가총액은 GDP의 150%에 육박하는 반면, 중국은 120%대(10월 말 주가 기준)에 머물고 있다. 더욱이 시가총액에 산입된 주식의 절반 이상이 실제 시장에 유통될 수 없는 비유통주로 묶여 있어 민간투자자들의 주식보유량은 더욱 제한된다. 바꿔 말하면, 탄탄한 대기수요가 여전히 존재한다는 뜻이다.

부동산가격 상승세는 불가피

부동산 시장은 불패신화가 태동할 국면이다. 북경의 주택 가격 상승률은 무려 18%(10월 기준, 전년 동월 대비)에 달한다.

무엇보다 수급균형이 무너져 있다. 올 들어 10월까지 주택 준공면적은 2.3억㎡에 불과했으나 판매면적은 2배가 넘는 4.9억㎡에 달했다. 과거 준공했으나 주인을 못 찾았던 주택이나 현 공사중인 주택이 입도선매식으로 팔려나간 결과이다. 2005년 8,300만㎡까지 치솟았던 공실면적은 10월 현재 5,800만㎡로까지 줄었다. 중국 대도시의 주택공급난은 상당기간 해소되기 어려운 구조라고 할 수 있다.

주택공급은 토지공급이 늘어야 늘 수 있다. 그러나 토지구매면적은 2004년을 정점으로 하향세이다. 농지의 공상용지 전환을 강력히 억제한 중앙정부 시책 때문이다. 반면 주택수요는 농촌인력의 도시이주, 도시민 1인당 주거면적의 상승, 기존 주택보유자들의 대체수요 등으로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저렴하고 유연한 중국 노동시장이란 기존 시각은 바뀔 때가 왔다.”

더욱이 주택개발업체들이 이윤이 박한 중소형 주택보다 대형 고급주택 영업에 집중하고 있어 서민들의 수급난은 더욱 가중되는 실정이다. 이 같은 구조적 모순은 정부가 내놓는 수요억제책만으로 풀리기 어려워, 주택 당국도 주택가격 상승세를 대세로 인정하는 분위기이다. 다만 급격한 상승세가 가수요를 낳아 거품을 일으키는 악순환을 차단하려는 것이다. 올림픽 개최 이후에도 부동산 가격의 강세는 추세적으로 지속될 것이다.

3. 노사 갈등국면 개막

개혁개방이 30주년을 향해 달려가는 지금 민간기업이 중국경제의 중추를 이루고 있다. 외자기업만 해도 중국 전체 공업기업 수의 20%를 차지한다. 그렇지만 기업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힘을 합쳐 회사 경영에 개입하거나, 공동의 복리증진을 관철하는 경우란 거의 찾기 힘들다. 여기엔 중국인들의 개인주의적 성향과 극심한 취업난으로 근로자들의 입지가 크게 취약하다는 점 등이 작용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은 취업난이 해소되지 않는 한 영속될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내년 발효되는 노동계약법(노동합동법)은 이 같은 기업-근로자의 관계에 대전환을 예고한다. 이 법은 공산당 지도부가 국정이념으로 내세운 ‘조화로운 사회건설’의 현실정책 버전이다. 조화로운 사회건설이 정치적으로는 소외계층을

위한 소득재분배를 지향하고, 경제적으로는 균형성장을 위한 소비기반 확대를 추구하기 때문이다. 노동자의 권익 보호는 이 같은 정책노선의 자연스런 연장이라고 할 수 있다. 도시 내 취약계층인 근로자들을 위한 재분배 재원을 기업에서 찾으려는 것이다.

무엇보다 신 노동계약법은 ‘저렴하고 유연한 중국 노동시장’이란 기존 외자기업의 관념에 수정을 요구하고 있다. 신 계약법은

〈표 1〉 노동 관련 입법 추이

시기	법규	주요 내용
92. 4	공회법	- 공회 권리/의무 규정
94. 7	노동법	- 단협, 기업 법규 준수 의무
04. 3	최저임금 규정 개정	- 기존 규정 전면 보완 강화
05. 2	노동보장 감찰조례 개정	- 노무관리 집행력 강화
07. 5	장애인취업조례	- 기존 노동부 규정을 강화
07. 6	노동합동법	- 노사계약, 전면적 보완
07. 8	취업촉진법	- 직원 교육의무 강화 등

“공회에 사실상의 3자 개입을 허용함으로써 경영권 행사에 부담이 커졌다.”

일종의 퇴직금인 경제보상금 규정을 신설, 매 근속연수마다 1개월 급여만큼의 인건비 상승요인을 만들었다. 장애인취업조례 등이 장애인 미고용에 따른 보상금을 청구하고, 공회(노조)비 등 준조세 성격의 보조금이 늘어나는 것을 감안하면 노무비용은 크게 뛰어오르게 된다.

유연한 노동시장도 옛말이 될 공산이 커졌다. 계약기간을 2회 연속 거쳤거나, 10년 이상 봉직한 직원들은 차기 노동계약시 기간을 별도로 명시하지 않는 ‘무고정기간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회사가 경영이 어려워져 감원할 때에도 20인 이상이면 30일 전 공회와 협의하도록 돼 있다.

주목되는 공회의 역할

신 법이 향후 노사갈등의 씨앗이 될 것이란 우려는 바로 공회의 역할, 구체적으로는 공회의 광범위한 ‘3자 개입’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위에서 언급한 감원 시 사전협의, 단체협상 분쟁 시 법원기소권, 취업규칙 제정 시 공동협의 등만 해도 위협적이지만 무엇보다도 공회가 조직되지 않은 기업에 대해서도 상급 공회단체가 지도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경영권 행사에 큰 부담이 될 것이 뻔하다.

중국 정부는 노동계약법 제정에 앞서, 노동감찰조례를 개정(05년 2월)해 행정 강제력을 강화했고, 최저임금 규정도 해마다 손질하고 있다. 적어도 외자기업의 노사갈등이 노정될 경우에 정부가 중립을 지킬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기업경영 상황을 잘 이해하고 노사간 ‘윈 윈 게임’을 수행할 수 있는 공회조직을 선도적으로 결성, 활용하는 것도 이 같은 노동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방안 중 하나일 것이다.

내년 노동시장에서는 정리해고 움직임이 표면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기업 입장에서는 생산성이 떨어지는, 잠재적 문제직원들의 경우 무고정기간 계약이 도래하기 앞서 정리하는 수순을 밟을 수밖에 없다. 종업원들은 장기간 근무할수록 경제보상금, 무고정기간 계약 등 보상이 강화되는 만큼 이직을 포기할 가능성이 높다. 노사간 팽팽하게 진행되고 있는 ‘눈치보기’가 내년 정리해고로 표면화되면, 자칫 전례 없는 노사갈등이 터져나올 지 모른다.

신규채용에서는 경력직 선호현상이 두드러질 전망이다. 고용의 유연성이 떨어

“서부내륙 투자에 대한
우대방침도 아직
불명확하다.”

지는 만큼 객관적으로 능력이나 성품이 입증된 직원이 대졸 신입직원보다 중시될 것이다. 외자 기업들은 이제 신규채용은 물론 인사고과, 보직변경 등에서도 보다 세심한 관리가 절실했다.

4. 외자기업 稅 테크에 고심

올 3월 전국인민대표자대회를 통과한 기업소득세법이 내년 1월 발효된다. 기업들에게 세금만큼 즉각적인 파장을 미치는 것은 없다. 기업소득세법이 로컬기업의 세율은 내리고, 외자기업 세율은 점진적으로 올려 2012년엔 25% 단일세율로 통일시키는 것인 만큼 외자기업들은 당장 수익 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기업소득세법이 의도하는 방향을 간추려보자. 신법은 화남 연해지역의 5대 경제특구와 상해 포동신구를 제외하고는 각 지역에 산재했던 입지형 세제혜택을 철폐했다. 특정 개발구에 입지했다는 이유만으로는 더이상 세 감면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심지어 서부내륙 투자에 대한 우대세율(15%) 여부도 시행세칙에 분명하게 명기되지 않았다.

입지 혜택을 철폐한 대신 국가가 산업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고신기술(高新技術)기업이나 환경친화 설비투자, 에너지절약 설비투자, 영세기업 등이 각각 15%, 20%의 우대세율을 적용 받는다. 조세권력의 주도권이란 관점에서 살펴보면, 각 지방정부가 우월적 결정권을 가지고 있던 입지형 혜택을 중앙정부가 산업정책 차원에서 거둬들이는 셈이다. 고신기술 자격요건도 고신기술구(區) 입주 여부와 무관하게, 연구개발 인력비중이나 특허보유 유무 등으로 자격요건을 강화했다. 우대세율 적용을 희망하는 외자기업은 HR, 재무, 특허 등 신경 써야 할 대목이 많아졌다.

아울러 매출의 70%를 수출하는 기업에게 부여했던 수출형 기업이란 우대항목(세액의 50% 감면)도 철폐했다. 과도한 무역수지 흑자가 거시경제에 부담을 주고, 통상마찰을 불러오기 때문이다.

“기업소득세법 시행세칙엔 외자기업의 과실송금을 차단하려는 의지가 녹아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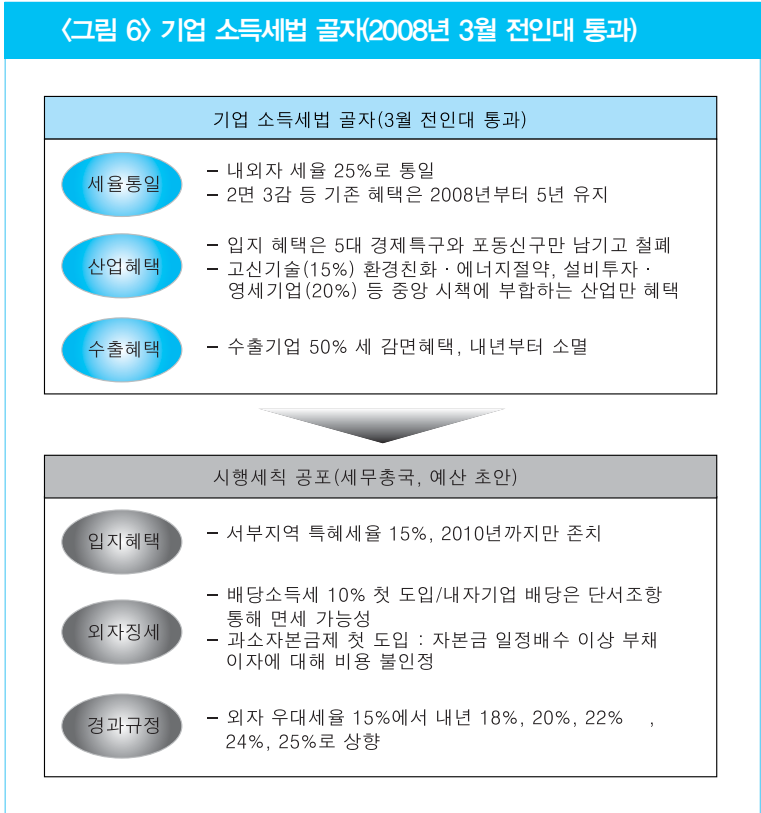
시행세칙에도 외자기업에 불리한 조항

최근 공포된 시행세칙을 보면 외자기업에 불리한 조항이 적지 않다. 10%의 배당소득세 신설, 최소자본금제 도입 등이 그것이다. 모두 외자기업의 과실송금을 차단하기 위한 장치이다. 배당소득세의 경우 외자기업에만 적용된다.

내년 외자기업들은 기업소득세율 인상 외에도 이전가격(Transfer Pricing)에 대한 중국 세무당국의 대대적인 조사압력에 시달릴 가능성이 높다. 우선 APA(Advanced Pricing Agreement)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이 제도는 이전가격 조작 등을 통해 이윤을 다른 국가로 손쉽게 이전시키는 글로벌기업의 관행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해당 기업이 부품이나 완성품을 수출입하는 해당국 세무당국과 3자 협상을 벌여 세액을 미리 산정하는 것이다. 양국 세무당국이 개입하기 때문에 글로벌 기업의 '절세공간'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미 일본 도시바, 미 월마트 등이 시행하고 있다.

중국 국가세무총국은 올해 주요 산업의 교역품목에 대한 가격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다. 부품값을 시가보다 높게 쳐서 들여오면서, 이윤을 본국에 넘기는 기존 관행이 타깃이다. 글로벌 기업들은 이제 이익배분 체계를 보다 합리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커졌다.

새로운 조세환경은 특정 산업 내 기업 경쟁 관계에도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중국 내에서 실효세율 25% 이상을 적용 받았던 업종은 은행, 통신서비스, 석탄, 철강, 화공, 무역, 부동산 등이다. 이들 업종에 참여하는 중국 로컬기업들은 세율이 내려가기 때문에 보다 많은 이윤을 재투자 등에 투입할 수 있을 것이다.



“신 세제하에선
중국에서 거둔 이윤을
적절히 배분해
내수사업 역량 강화에
투입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중국 세무당국의 조치들은 글로벌기업들에게 이윤을 중국 내에 남겨 활용할 것을 유도한다. 기업소득세가 25%로 상향되더라도 국제 표준(28%)보다 여전히 낮다는 것이 중국의 주장이다. 글로벌기업 중 일부는 조세환경의 변화를 내수사업 역량을 키우는 기회로 삼을 수도 있을 것이다.

중국 정부는 기업소득세법이 과도기를 거친 다음 매년 최소 900억 위안 이상의 세수 결손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재 재정적자 규모가 GDP의 1% 남짓(2006년 기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복지재원이 크게 부족해지진 않는다.

중국은 국제 표준에 비해 간접세 비중이 높은 구조를 가지고 있다. 재화 및 서비스 가격에 포함되는 간접세는 상대가격을 왜곡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 이번 기업소득세법 적용으로 기업소득세 결손이 나타날 경우 간접세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시장개혁엔 역행하는 셈이다.

5. 환경보호 · 에너지 관리 비상

‘무엇을 위해 성장하는가’

중국 공산당이 이런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환경오염이 생활의 질을 떨어트리고, 지속가능성장의 걸림돌로 등장했기 때문이다. 하천의 70%가 오염돼 있고, 국토의 27%에서 이미 사막화가 진행되고 있다. 고도성장으로 석탄, 철강 등 자원을 마구 투입하는 과정에서 에너지 저효율도 문제로 등장했다. 중국정부는 11차 5개년 계획에 자원절약 및 환경보호를 기본국책으로 내세운 데 이어 10월 17차 공산당대회에서도 ‘생태문명 건설’이라는 목표를 처음으로 제시했다. 물질문명, 정신문명에 이은 제3의 문명이다.

지금 중국 정부에겐 환경오염 방지와 에너지 효율제고가 발등의 불이다. 이 분야 목표치는 달성에 실패할 경우 담당자가 인사상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구속성’ 지표다. 11차 5개년 계획 기간(2006~2010)중 GDP당 에너지 소비량은 20% 줄이고 환경오염 물질배출량은 10% 줄인다는 원대한 목표가 채택됐다. 그러나 시행 첫해인 지

“중국의 전방위적 환경 에너지 정책의 채택은 글로벌 스탠더드의 일환인 만큼 전향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난해 GDP 증가율은 10.7%에 달했지만, 에너지 소비율은 1.23% 감소에 그치고 오염 배출 총량은 오히려 1.6% 늘어버렸다. 올해 목표치 달성여부도 불투명하다.

내년은 5개년 계획 관리목표의 ‘중간 점검의 해’이다. 각급 정부별로 관리목표가 주어지고, 중앙 지방 사업단위 관리층에도 적당한 목표치가 주어지고 있다. 중간점검 기간 목표달성에 실패한다면, 2010년 목표달성은 사실상 물 건너간다. 또 내년 ‘그린(Green) 올림픽’이라는 북경올림픽 슬로건도 무색해질 수 있다.

기업부담 증가는 피하기 어려워

올 10월 국가환경보호총국이 발표한 ‘상장회사에 대한 환경심사 관련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앞으로 상장을 희망하는 기업은 과거 3년에 걸친 환경조사를 거쳐야 한다. 기준 미달업체는 상장을 포기해야 한다.

금융권엔 ‘녹색대출’ 심사체계가 도입됐다. ‘블랙 리스트’에 올라 있는 12개 오염유발 기업들은 은행 대출을 거부당했다. 오염업체는 수출도 어렵다. 상무부가 10월 환경법규를 준수하지 않은 기업에 대해선 3년 동안 수출 쿼터를 승인하지 않고 수출 허가발급도 중단키로 했기 때문이다.

환경오염 업체들에 대한 당국의 감독 견제는 더욱 강화될 것이다. 올 3월부터 시행된 ‘전자정보제품오염방지관리법’은 전자 완성품 및 부품에 납, 수은, 카드뮴 등 6개 유해물질의 사용을 제한한다. EU가 채택한 ‘유해물질사용규제(RoHS)’와 흡사해 ‘중국판 RoHS’로 불린다.

11월 중순 베이징 공상관리부가 시판 중인 전자제품을 수거해 정밀 검사한 결과, 일 산요(Sanyo)와 중국 토종기업인 Noah (諾亞舟)의 제품이 본보기로 적발됐다. 산요의 경우 전자레인지의 케이스에 기준치 이상의 유해중금속이 함유됐고, 나사못의 도금 부분에서도 발암물질인 크롬이 검출됐다. 두 부품 모두 중국 하청업체가 납품한 것이었지만, 최종 조립한 산요가 책임을 진 것이다. 이 법의 시행세칙인 ‘오염방지 중점관리 목록’이 내년 중 공포되면, 정부 인증을 거친 뒤에야 수입 및 판매가 이루어 질수 있도록 규제 강도가 더욱 강화된다.

‘순환경제법’도 내년 통과가 유력하다. 이 법은 폐기물이용, 환경오염 업종의

“에너지법이 내년
통과될 경우 단계적인
에너지 가격 자율화가
예상된다.”

성장 제한, 생산자책임제도 확대 등을 담고 있어 기업에도 포괄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지난해부터 추진해온 ‘기업 환경관리 평가제도’도 2010년 전국 확대를 앞두고 내년엔 시범대상을 더욱 확대할 것이다. 기업의 환경관리 수준을 5단계로 평가해 불량기업에는 생산중단 조치까지 취할 수 있다.

에너지시장 개혁의 기본법인 에너지법 초안은 이달 3일 공개됐다. 초안에 따르면 향후 정부의 에너지 가격결정권이 지속적으로 약화되는 한편, 일부 에너지 제품에 대해 가격자유화 조치가 취해진다. 에너지 가격을 인위적으로 낮게 통제하는 바람에 자원소모가 심해졌다는 반성에 따른 것이다. 에너지법이 통과되면 가격 자유화가 점진적으로 진행, 전기 수도요금 등도 상승추세를 보일 것이다.

〈표 2〉 중국의 주요 에너지·환경정책 및 법규

도입	법률 및 법규	주요내용
2002.6	청결생산촉진법	- 환경오염 배출이 심각한 기업 명단 대외 공표
2004.12	고체폐기물 환경오염 방지법	- 폐기물 생산, 판매, 수입 과정 중 발생한 오염에 대한 책임
2005.9	폐기가전제품 및 전자제품 회수처리 관리조례	- 폐기가전 대상 제품 회수에 대한 생산자, 수입자, 판매자의 책임 규명 (전자제품의 종류, 생산량, 판매량 등의 정보를 당국에 제공)
2005.11	기업환경관리 평가제도	- 기업의 환경관리 상황을 평가하여, 우수기업으로부터 녹-청-황-홍-흑색 칭호 부여 - 연속 2회 이상 흑색기업으로 판정된 경우 생산중지 등 오염처리 불량 기업에 대한 규제 강화 - 2006년 시범 실시, 2010년 전국 모든 도시로 확대 실시
2005.12	과학적인 발전에 입각한 환경보호 강화에 관한 결정	- 환경보호 관련 시설을 해당 프로젝트와 동시에 설계, 시공하는 한편, 생산물 생산 시에 환경설비가 가동되도록 하는 3동시(3同時)제도 시행
2006. 1	재생가능 에너지 자원법	- 중장기적인 재생가능 에너지 생산량 목표와 발전계획, 지원제도와 기술개발 등
2006.2	환경보호 위반 행위의 처벌 규정	- 정부기관, 공무원 등의 환경보호 관련 위반 시 경고에서 직위해제의 처벌 기준 마련
2006. 3	생산능력 과잉산업 구조조정 에 관한 통지	- 과잉투자산업 및 잠재적 과잉업종의 신규진입 제한
2007.3	전자정보제품 오염통제 관리 방법 (중국판 RoHS 법)	- 전자제품의 유해물질 함유량, 포장재질 명시 - 중점관리 품목 제정 및 강제 인증
2007.5	재생가능자원 회수관리법	- 재생자원 회수체계 구축 및 부문간 책임규명
2008.2(예정)	순환경제법	- 순환경제 지표와 목표책임제 규정 - 일부 에너지 고소모, 고오염 산업에 대한 규제 - 생산과정에서 도태기술이나 설비, 제품을 사용하는 기업의 생산금지 및 민형사상 책임
2008.2(예정)	전기폐기물 환경오염방지 관리방법	- 전기폐기물 처리과정의 기술표준 도입 - 무단 처리하는 기업은 벌금 최고 50만 위안 부과
2008.4(예정)	에너지 절약법 수정안	- 부동산 개발기업은 건물 분양 시 매입자에게 에너지 절약조치 명시

자료 : 중국 개혁발전위원회, 중국환경보호국, 대한상공회의소 등

“ 내년 3월 대만
총통선거 결과가
양안관계의 향방을
결정할 것이다. ”

중국의 에너지 환경정책 변화는 글로벌 스탠더드의 일환이기도 하다. 외자기업으로서 이러한 중국정부의 정책변화에 부응, 새로운 사업기회를 찾아보는 역발상이 필요하다. 환경친화적 제품의 생산, 환경보호에 기여하는 공익 캠페인이 기업 이미지를 제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6. 갈림길에 설 양안(兩岸) 관계

대만의 독립을 둘러싼 양안의 갈등이 내년 중대 고비를 맞는다. 3월 실시될 대만 총통선거를 앞두고 벌어지는 대만 각 정파의 선거캠페인이 긴장을 극대화하고 있다. 2000년 천수이벤(陳水扁) 민진당 후보가 총통에 당선되면서 양안의 정치관계는 시종 갈등과 긴장국면을 벗어나지 못했다. 내년 총통선거는 이 같은 긴장관계가 폭발하느냐, 아니면 새로운 협력관계로 이행하느냐를 결정짓는 계기가 된다.

우선 대만 당국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최근 대만교육부는 교과서에 쓰여진 ‘양안’이라는 말을 ‘양국’으로 바꿨다. 독립을 주창해온 현 천수이벤 총통은 아예 선거 캠페인에 현재의 공식명칭인 ‘중화민국’ 대신 ‘대만’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UN가입 여부를 묻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민진당이 이번 대선에서도 승리, 장기 집권 시기를 열어간다면 대만 독립은 더욱 현실감을 띠게 된다.

당연히 중국의 신경은 매우 날카롭다. 올 10월 5년 만에 열린 17차 공산당 전국대회에서 대만의 본토 분리정책을 절대 허용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천명함과 동시에 ‘하나의 중국’의 깃발 아래 평화협상을 진행하자는 ‘당근카드’를 동시에 꺼냈다.

중국은 이미 2005년 3월 군사력을 동원하는 법적 절차 등을 규정한 ‘반국가분열법’을 제정했다. 대륙의 지도자들은 경우에 따라 군사적 해결수단을 동원하겠다는 의지를 여러 차례 언급해왔다. 그렇다면 민진당이 정권연장에 성공해 독립의 길을 걸을 경우 정말 양안에 포성이 울릴까. 그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무엇보다 양 진영 모두에게 전쟁이란 카드는 엄청난 기회비용을 요구한다. 2008년 올림픽을 코앞에 둔 상황에서 중국의 무력공격은 올림픽 회원국들의 보이콧으로 이어질 게 뻔하다. 미국을 통한 우회압박, 무력시위에 그칠 공산이 크다는

“민진당의 대만독립

노선이 중국의 견제에 밀려 최근 유권자들의 표심을 크게 자극하지 못하고 있다.”

얘기다. 그러나 압박 수준의 갈등만으로도 양안관계와 인접 경제권은 적지 않은 충격을 받을 것이다.

현재 대만 민진당은 ‘대만 정체성’을 선거전략으로 내세웠다. ‘UN 가입 찬반 국민투표 실시’ 건도 가입을 실현시키려는 목적보다 대만 주체성을 강조함으로써 야당인 국민당의 이중적인, 나약한 이미지를 부각시키려는 목적이다. 대만 헌법 상 3번 연임은 불가능하다. 천 총통으로선 ‘정치적 장자’인 세장팅(謝長廷, 61) 후보를 당선시켜야 퇴임 이후에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일국론(一國論)’ 정책을 표방한 국민당의 선거 카드는 ‘경제’이다. 마잉주(馬英九, 57)후보는 경선전에서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6%이상, 2011년까지 1인당 GDP는 2만달러, 실업률 3% 이하’를 공약했다. 이러한 공약은 중국과의 경협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중국은 이 같은 국민당의 선거전략을 암묵적으로 지지함으로써 독립세력을 견제하고 중국적으로 평화통일을 달성할 수 있다. 항일전쟁 기간 양당의 1, 2차 국공합작에 이은 ‘3차 국공합작’이 실현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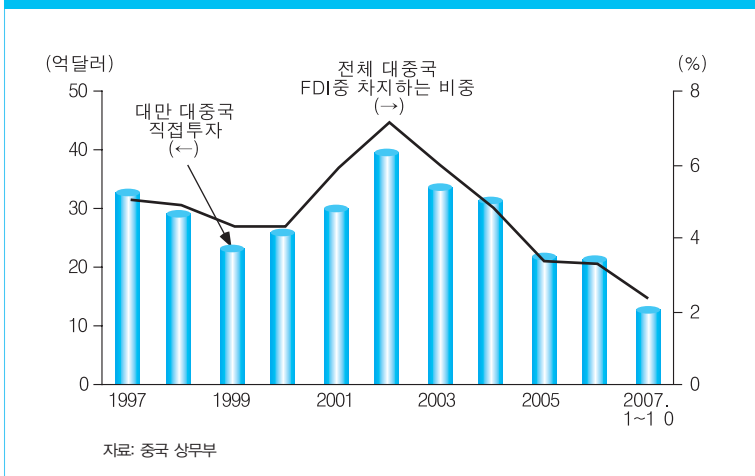
중국은 개혁개방이래 경제적으로 대만포용 정책을 취해 왔으나 2000년 민진당이 집권한 이후 ‘경제 종속’을 경계, 대중투자를 제한하면서 양안 경협은 위축돼 왔다.

올 11월 말에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국민당 마 후보와 민진당 세 후보는 각각 58.6%, 41.4%의 지지율을 나타냈다. 현재로선 어느 한쪽의 일방독주를 점치긴

어려운 상황이다. 다만 최근 민진당에 대한 지지도가 하락하고 있는 반면, 국민당의 지지도가 꾸준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그 이유는 먼저 민진당의 집권 초기에 시작된 경기침체가 좀처럼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또 천 총통이 취임 이래 채택해온 대만독립 추구 정책이 중국의 강력한 견제에 밀려 국제사회에서 아무런 실익을 거두지 못했다는 비판이 상당하다. 대만 독립의 잠재적 우군인 미 행정부도 어정쩡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림 7〉 대만의 대 중국 직접투자 (이용액 기준)



“국민당 후보가 당선될 경우 양안 관계는 획기적 전기가 마련되면서 대만기업들의 중국진출도 더욱 두드러질 것이다.”

반면 국민당은 연예인처럼 준수한 외모의 타이베이 시장 마잉주를 대선후보로 낙점함으로써 기존 노쇠, 무능의 이미지를 상당부분 탈색시켰다. 2005년엔 련잔(連戰) 국민당 주석이 대륙을 방문, 60년 만에 후진타오 공산당 총서기와의 면담을 통해 양안의 협력과 확대를 위한 구체적 합의를 달성함으로써 양안관계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 시작했다. 이런 추세에 힘입어 최근 지방선거에서 국민당은 남부 일부를 제외한 전 지역에서 민진당을 앞섰다.

마잉주 후보가 당선될 경우 양안간의 인적 물적 교류가 획기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는 대만 기업인들이 많다. 대만잡지 ‘천하’가 최근 대만기업인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71%가 ‘현재의 양안관계가 기업활동에 불리하다’고 지적했고, 향후 양안간 혁신적인 개방정책을 기대했다. 중국도 이에 화답하듯 올 3월 전인대에서 양안 바다 밑에 해저터널을 놓는 야심찬 계획을 내놓았다.

양안의 신흥력 시대는 정치적 안정으로 이어질 것이다. 이는 한국 기업에게도 잠재적인 양안 리스크를 줄인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그러나 대만기업의 대륙진출이 활발해질 경우 전자산업 분야의 글로벌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공산도 높다.

〈그림 8〉 대만 양 대선후보의 대륙정책 비교

	마잉주(馬英九) : 국민당	세장팅(謝長廷) : 민진당
기본 입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칙 개방, 예외규제 - 대륙과 협상을 통해 평화협의 달성 - 대륙과 군사 상호신뢰구축 - 양안 적대관계 종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체성과 개방성 병행 추구 - 적당규제 (첨단기술분야의 대 대륙투자) - ‘화해 공생(和解共生)’ 을 강조
경상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안의 경제무역 정상화 - 전통산업, 서비스업 진흥 및 신흥산업 개척 - 자유무역지역 건설 및 ‘직통’ ‘삼통(통상(通商) 통항(通航) 통우(通郵)) 촉진 - 금융시장 개방 및 대륙진출 - 투자보장협의 체결 - 양안 공동시장 형성을 촉진 - 이중과세방지 합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먼저 대만내부의 소득분배 불균형 등 문제 - ‘행복경제정책’ 주장 - 협상메커니즘 재구축 - 양안간 전세기 운영 허용
산업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륙 노동자의 ‘대만행’ 허용 검토 - 대륙 농산품 수입 불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륙 노동자의 ‘대만행’ 반대 - 대륙 농산품 수입 반대
문화관광 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륙인의 대만관광 적극 촉진 - 대륙에서 취득한 학력 인증 - 대륙 학생의 대만학교 입학 허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륙에서 취득한 학력 불인증 - 대륙인의 대만관광 허용여부 불분명

“내년엔 더욱 많은 중국기업들을 글로벌 시장에서 만날 수 있을 것이다.”

7. 세계로 뻗어나가는 중국기업

중국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글로벌 영향력은 해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2007년 미 시사경제지 Fortune이 발표한 ‘글로벌 500대 기업’에는 중국 기업이 모두 24개나 포함됐다. 전년 보다 4개 늘어난 실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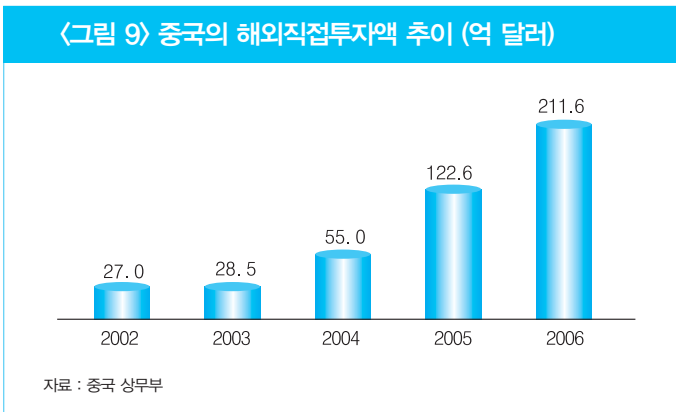
고도성장에 힘입어 중국기업들의 수익구조는 빠르게 탄탄해지고 있다. 지난해 국유기업의 순이익은 1조 2,200억 위안으로 전년 대비 35% 늘어났다. 올해 Fortune의 글로벌 500대 기업의 매출 커트라인이 (전년 실적 기준) 148억 달러였음을 감안하면, 최근 중국 위안화 절상과 기업실적 호전 추세 등으로 Lenovo (올해 예상 매출 187억 달러), Haier (145.2억 달러) 등 대표적인 전자업체들은 이미 500대 랭킹의 뒷자리를 예약해놓은 셈이다.

신화사가 작년 전국 102개 기업을 상대로 설문 조사한 결과, 48.8%의 기업들이 2년 내, 70%의 기업은 4년 내 해외투자에 나설 것이라고 답했다. 이 가운데 20%의 기업은 천만 달러 이상의 해외투자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있었다. 올해 중국 증시의 활황세를 타고 중국의 대형 국유기업들의 상장이 붓물을 이뤘다. 내년에도 기업공개(IPO) 열풍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IPO를 통해 조달한 거액 자금 중 상당부분은 해외 M&A시장에서 신탄으로 사용될 것이다. 중국기업들의 글로벌화는 내년 세계경제 성장세 둔화 속에서 더욱 빛을 발할 전망이다.

중국기업들의 해외진출은 다목적 카드다. 자원 및 원부자재 확보, 하이테크 습

득, 글로벌시장 확보 등 중국 정부의 주요 경제목표인 에너지원 확보 및 에너지 효율제고, 기업의 자주창신 등과 깊은 관련을 맺고 있다. 기업들의 진출방식도 현지 사무소 → 현지 합작법인 설립 → 독자법인 설립 등 점진적 시장 진출뿐 아니라 유력 기업 인수를 통해 단번에 시장지위를 올리는 인수합병까지 다양하다. 상무부에 의하면 2006년 말 기준 중국 기업의 해외투자 총액은 211.6억 달러에 달했으며 약 5,000여 기업이 172개 국가에서 자회사를 설립 및

〈그림 9〉 중국의 해외직접투자액 추이 (억 달러)



“중국 기업들의 해외진출은 정부의 대대적인 정책지원을 받고 있다.”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분야도 자원개발, 전자통신을 거쳐 물류, 금융서비스 등으로 첨단화하고 있으며, 진출지역도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등으로 확산되고 있다.

중국 기업의 해외기업 인수합병 건수는 2002년 당시 20여 개에 불과했으나 2006년에 80건으로 크게 증가했고, 거래금액 규모 역시 144억 달러에 이르고 있다. 특히 원유 등 에너지 및 천연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공격적인 M&A 행보는 매우 위협적이다. 2000년 이후 중국의 M&A 거래금액과 건수는 모두 한국을 앞서고 있다.

중국기업들의 ‘저우추취(走出去)’ 바람의 저변엔 사상 최고치를 기록중인 외화보유액이 상징하는, 풍부한 유동성과 자금력이 깔려있다. 외화보유액(10월 현재 1.46조 달러)의 확대는 국제금융시장 리스크에 대한 대응력 강화, 세계경제에 대한 영향력 증대 등 긍정적인 측면도 적지 않으나 다른 한편으로 위안화의 절상압력을 높이고 통화량 팽창을 가져오는 문제점을 낳고 있다. 따라서 기업들의 해외진출 장려는 부작용을 해소하려는 일환이기도 하다.

2004년 중국수출입은행은 해외투자 기업을 위해 저금리 대출을 지원해주는 한편 상무부는 일종의 투자 가이드라인인 ‘대외 국별 산업별 지도목록’을 발표했다. 2006년 10월엔 ‘중국기업의 해외투자 합작장려 및 규범화에 관한 의견’을 발표해 관련 수속 간소화 등 지원제도를 법제화시킨 데 이어 중국수출신용보험공사가 해외투자 자문, 위험평가, 위험통제 및 투자보험 등 관련 보험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기업들의 외화보유 한도 또한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올 1월 차이나 모바일(中國移通)이 파키스탄의 룩셈부르크 통신사업자 파크텔(Paktel)의 지분 88.8%를 2억8천만 달

〈표 3〉 최근 중국기업의 주요 인수현황

금융기업			
시기	투자기업	투자대상기업 (지분, 국가)	규모
2006년 8월	건설은행	BOA 아시아 (100) (홍콩, 마카오)	12억 달러
2007년 5월	외환투자공사	블랙스톤 (10) (미국)	30억 달러
2007년 7월	개발은행	바클레이스 (3) (영국)	22억 유로
2007년10월	공상은행	스탠더드 बैं크 (20) (남아공)	56억 달러
제조업체, 통신사			
시기	투자기업	투자대상기업 (지분, 국가)	규모
2007년 1월	中國移動	파크텔 (Paktel) (89) (파키스탄)	2.8억 달러
2007년 3월	廈門紫金銅冠	몬테리코 (Monterrico) (90) (영국)	14억 달러
2007년 7월	北方重工	NFM (70) (프랑스)	-
2007년10월	長江基建	트랜스알타(TransAlta)(100) (캐나다)	6.5억 달러

“경제규모에 비춰볼 때 중국기업의 해외 인수합병 확대 가능성은 매우 높다.”

리에 인수한 데 이어, 3월 하문자금동관(廈門紫金銅冠)이 영국 상장 광업사인 Monterrico를 사들이기로 합의했다. 7월 북방중공(北方重工)그룹이 터널시공 분야의 세계적 브랜드인 프랑스 NFM, 10월 홍콩 장강기건(長江基建)은 캐나다 최대 민영발전사인 TransAlta를 각각 인수키로 했다. 중국의 3대 은행인 건설은행, 공상은행, 중국은행은 최근 몇 달 동안 해외 금융기관의 지분인수에 뛰어들었다.

해외진출의 주류를 이뤘던 대형 제조업체들은 경험부족, 현지 적응력 결여 등으로 인해 적지 않은 실패를 맛보았다. 2004년 IBM의 PC사업부를 인수한 Lenovo는 시장점유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자 임직원 천 여명을 정리하는 등 자구조치를 취

했다. 프랑스 Thomson의 TV 사업부문을 인수한 TCL도 시장수요 변화를 예측하지 못하다가 2천만 달러의 손실을 기록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 속에서 중국 거대기업들의 글로벌 역량이 축적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Lenovo는 올 7월에 2010년까지 인도, 멕시코에 모두 합쳐 3,100만 달러를 투자하겠다는 청사진을 밝혔고 TCL도 올해 인도에 생산기지를 구축하면서 당분간 유럽보다 아시아시장을 개척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올해 국제 자동차전람회에서 큰 주목을 끌었던 중국 자동차업체들도 본격적으로 글로벌시장 공략에 나서고 있다. 체리자동차가 내년부터 러시아에 연간 2만5천대의 승용차 조립 계획을 세웠고 제일기차도 동남아 등 지역에서 쌓은 글로벌 경험을 바탕으로 지난 달 멕시코에 거점을 마련하기로 결정했다.

보스틴 컨설팅의 추산에 따르면 세계 13대 고성장개발도상국(RDE) 가운데 중국의

〈표 4〉 중국 국제 인수 합병 거래 건수 상위기업 (건, 천 달러)

기업명	거래건수 (건)	거래액 (천 달러)
HuaWei Technologies Co., Ltd	7	189,576
China Petroleum & Chemical Corporation	6	3,547,135
Shanghai BaoSteel Group Corporation	4	260,113
China National Petroleum Corporation	4	153,360
Shanda Interactive Entertainment Ltd	4	151,700
Chengwei Ventures LLC	4	45,500
Air China Ltd	3	692,150
Haier Group	3	179,281
Sina Corporation	3	161,032
Sinochem International Corporation	3	129,670

자료 : BvD, ZEPHYR Database, 2007

〈표 5〉 한중일 해외 M&A 연도별 거래건수 및 거래금액 비교 (백만 달러)

	중국		한국		일본	
	건수	거래액	건수	거래액	건수	거래액
2000	12	1,502	9	123	153	14,709
2001	17	588	13	1,399	156	17,340
2002	25	1,180	20	852	125	5,981
2003	67	1,517	45	2,872	233	15,430
2004	129	2,754	49	2,768	291	22,206
2005	77	2,137	40	922	262	13,552
2006	80	14,449	34	2,901	231	32,918

자료 : BvD, ZEPHYR Database, 2007

GDP 비중은 29.4%나 되지만, 해외 M&A비중은 10.6%에 그치고 있다. 거대 경제 규모나 높은 대외의존도 등을 감안할 때 중국 기업의 해외지출은 더욱 가속화할 전망이다. 한국기업과의 경쟁전선도 더욱 확장될 것이다.

“북경 올림픽 개최는 경제적인 부의 창출보다 중국의 국가이미지 제고효과에 더 큰 의미가 있다.”

8. 중국 문화산업의 르네상스 오나

북경올림픽 개최의 기대효과는 투자확대 및 고용창출에 머물지 않는다. 사실 북경이 중국 전역에서 차지하는 GDP 비중은 4%에도 미치지 못해, 이러한 경제파급 효과는 중국 거시경제 전체적으로 큰 주목거리가 되지 못한다.

오히려 중국 정부가 더 중시하는 것은 ‘국가 이미지의 제고’란 외부적 효과와, 올림픽 개최국이란 자긍심이 중국인들의 의식구조에 미칠 다양한 ‘선진화’ 효과이다.

중국은 올림픽을 통해 환경오염국, 인권탄압국이란 대외적 이미지를 씻어내려 하고 있다. 이에 맞서 국제인권 단체들 역시 대대적인 항의시위를 계획할 수 있다. 경우에 따라선 수십억 시청자들 앞에서 부정적인 이미지가 연출될 수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이미지가 개선되는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 아울러 개인주의적 성향이 강한 중국인들에게 올림픽이란 행사는 국가와 공동사회의 소중함을 각인시키는 좋은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 광대한 사회의 통합과 조화로운 사회건설 작업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이다.

중국 정부가 ‘인문(人文) 올림픽’이라는 슬로건을 내세운 것도 문화교류 및 홍보를 통해 시민의식 등 소프트웨어 분야를 획기적으로 제고하려는 포석을 깔고 있다. 올림픽 엠블럼, 메달 등의 디자인도 대부분 중국 전통가치관을 상징화시켜 해외 홍보에 이용하고 있다. 이젠 세계인들에게 어느 정도 친숙해진 마스코트 푸와(福娃) 역시 판다, 티베트 영양, 제비 및 올림픽 성화의 이미지가 녹아있다. ‘중국적인’ 상징을 국가홍보에 총동원하고 있는 것이다.

2006년 공개된 ‘사회발전 11차 5개년 계획’엔 국가예술공연

〈표 6〉 중국인 해외여행자수와 중국방문 외국인 여행자수 추이 (만 명)

	외국인 관광객(입국)	중국인 관광객(출국)
1995	589	714
2000	1016	1,047
2001	1,123	1,213
2002	1,344	1,660
2003	1,140	2,022
2004	1,693	2,885
2005	2,026	3,103
2006	2,221	3,452

자료 : CEIC

“중국 문화산업이
올림픽을 계기로
중흥의 계기를 맞을
가능성은 매우
높다.”

센터 등 6개 문화센터 건립을 중심으로 문화산업을 베이징의 기동산업으로 발전시키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2010년까지 100억 위안을 들여 남 베이징에 신미디어 산업단지를 건설하는 등 내년 북경 GDP의 9%를 문화산업에서 창출한다는 전략이다. 이 계획에는 베이징 외에도 장강삼각주 주강삼각주 발해지역에 3대 문화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한다는 안도 포함됐다. 2005년 말 1,400억 달러에 머물고 있는 문화산업의 규모를 5년 만에 5,000억 달러 규모로 키운다는 복안이다. 중국이 아시아권에서 가장 찬란한 고대문명을 탄생시켰고 엄청난 문화유산이 현존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복안이 현실화할 가능성은 매우 높다. 이미 중국 작가들의 예술작품들이 국제 경매시장에서 엄청난 고가에 팔리고 있다는 점에서 잠재력은 무궁무진하다.

중국 문화산업 진흥의 계기는 외국인 관광객의 확대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역대 개최국의 선례를 보면, 서울(1988년)의 경우 22만 명(수입 34억 달러), 바르셀로나(1992년) 35만 명(35억 달러), 시드니(2000년) 35만 명(43억 달러) 등 상당한 효과를 거뒀다. 내년 베이징 올림픽 기간엔 외국인 관광객이 50만 명을 넘어 역대 최대규모가 될 전망이다. 직접 수입이 50억 달러에 달하고, 중국 이미지 제고효과는 무궁무진할 것으로 중국 당국은 기대하고 있다.

최근 수년간 외국인들의 중국 방문객 수는 10~20%의 증가율을 보여왔다. 선진국의 휴가철엔 북경 수도공항의 입국심사대는 인산인해를 이루는 때가 많다. 외신 보도 등을 통해 부정적 이미지에 익숙해진 외국인들에게 북경 직접 방문은 이미지 쇄신의 호기가 아닐 수 없다.

중국이 기도하는 또 다른 올림픽 효과는 ‘디지털 올림픽’이다. 올림픽에 맞춰 디지털 방송을 확대함으로써 디지털 음악시장 및 디지털 엔터테인먼트 산업을 육성하려는 구도다. 특히 올림픽 기간 TV시청자가 40억 명이 넘을 것으로 추산되어 방송통신 및 광고 분야의 폭발적인 성장도 기대할 수 있다. 아울러 각종 음악공연 미술전시회 등 문화 이벤트를 동반 개최해 회색으로 채색된 국가이미지를 개선하려 시도하고 있다.

올림픽 폐막 후엔 14개 경기장과 올림픽 공원은 새로운 관광자원으로 전용한다는 계획이 서있다. 이 설비에는 각종 부가서비스 시설이 완비되어 있어 문화, 공연,

회의 등에 활용될 예정. 메인 경기장 옆에 세워진 수영경기장 ‘수립방 (水立方)’은 스포츠 엔터테인먼트의 산실로 육성될 전망이다. 바야흐로 북경 올림픽은 중국의 옛 문화영화를 되살릴 호기로 작용할 전망이다. www.lgeri.com

“올림픽 개최도시 북경은 중국 문화클러스터로 자리매김될 수 있을 것이다.”